



(회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735호 T. 02-784-3174 F. 02-6788-6985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9번길 10, 선진빌딩 302호 T. 031-875-0410 F. 031-875-0414

배포일 : 2024년 10월 25일(금)

담당 : 이진선 선임비서관

배포일 : 배포 즉시 보도 요청

박지혜 의원,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마저 바뀌어”

- 산업부의 공급의무화제도 개정으로 RPS 의무량 줄어
- 박지혜 의원 “산업부 지침 개정은 재생에너지 산업 죽이는 꼼수 행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월 27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을 일부 개정해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의 지침 개정으로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이 약 600GWh 감소한다. 이는 서울시 기준 약 164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는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의무공급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발전사업자는 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신재생에

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RE100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발전사의 전체 의무 공급량에서 제외된다. 이에 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전환 의무가 축소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 산업부가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산업부의 고시 개정을 ‘재생에너지 산업을 죽이는 꼼수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지침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① (생 략) 1.~2. (생 략) 3.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별표 1>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 □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 조정의무비율(%) 영 별표3에 = 다른 연도별 비율 기존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수력 및 조력 발전량 공급의무자 기준발전량의 합 주1) 단, 수력 및 조력은 시행규칙 제2조의2의 1.2호에 해당하는 수력 및 조력을 의미 주2) 조정의무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신 설>	제6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u>지원받은</u> 신·재생에너지 설비 <별표 1>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 □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 조정의무비율(%) 영 별표3에 = 다른 연도별 비율 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수력 및 조력 발전량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발전량 공급의무자 기준발전량의 합 주1) 단, 수력 및 조력은 시행규칙 제2조의2의 1.2호에 해당하는 수력 및 조력을 의미 주2) 조정의무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주3) 단,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발전량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3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발전량에 한정 주4) 주3)에도 불구하고 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수력 및 조력 발전량으로 발생한 발전량은 사용 확인 발전량에서 제외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비고 1.~7. (현행과 같음) 8.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u>지침 제10조에 따른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된 풍력 발전사업자의 경우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른 설비확인시 확정하는 가중치는 해당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공고일 당시 별표 2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다.</u> 부 칙 <2024. 0. 0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9.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3. 개정안대로 개정될 경우 RPS 의무공급 사업자들의 의무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구체적인 수치

- ☐ '24년 전체 공급의무자 의무공급량은 약 60만 REC(총 의무량의 0.7% 수준) 감소 예상('24.1월 공고 기준)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1MWh당 1REC 발급

**자료: 산업통상자원부